

미래 한국가족의 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s and Counter-measures of Future Korean Family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래 한국가족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가족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 한국가족의 특성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가족환경 변화는 혼인가치관, 성평등 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양육책임 한계,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가족의 취약 및 위기 요인의 증가, 가구 및 개인의 인터넷 이용 증가, 토요휴무제 도입 및 확산 등을 설명하고, 미래 한국가족의 특성으로 가구의 지속적 분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취업증가와 돌봄서비스 부담 증대, 가족내 성평등의 강화(여성권한의 상승과 남성권한의 저하), 이혼 및 재혼가족의 증대, 다문화가족의 증대, 취약·위기가족의 증대, 가족 여가문화 확산 및 중요성 증대를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한국가족의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로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 및 사회적 보호의 강화, 돌봄서비스 및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성평등 의사결정 및 가족문화의 정착 지원,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가족 여가시간의 활용 지원 및 가족스스로의 노력 필요 등을 제안하고 있다.

1. 도입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 경제발전,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취업 증대,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괴리, 가족이기주의와 가족해체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세대, 남녀, 교육수준, 재산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여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래 한국가족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그랬듯이 향후에도 한국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과연 무엇이 우리 가족의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먼저 가족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 한국가족의 특성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2. 가족환경의 변화

1) 혼인가치관의 변화

가족환경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결혼 및 재혼에 대한 가치관과 가족해체를 의미하는 이혼가치관이라 하겠다. 먼저 결혼가치관을 ‘결혼 필요성’에 의하여 기혼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인 ‘반드시 해야 함’과 ‘하는 편이 좋음’은 2000년 55.6%, 2003년 54.4%, 2006년 57.7%, 2009년 60.6%(남성 71.9%)로 변화하였다. 이와

는 달리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과 ‘하지 않는 편이 좋음’이라는 결혼에 대한 비교적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기혼여성이 2000년 53.6%, 2003년 45.0%, 2006년 42.2%, 2009년 39.4%(남성 28.2%)로 감소하였다.

기혼자의 결혼가치관과 비교하여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보였다. 2009년 조사자료를 비교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함’의 비율은 기혼여성 28.5%, 미혼여성 16.9%로 차이를 보였고, 기혼남성 39.8%, 미혼남성 23.4%의 차이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함’의 차이를 보면, 기혼자는 11.3%pt, 미혼자는 6.5%pt로 나타났다.

표 1. 15~64세 기혼자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2000~2009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기혼여성	26.2	29.4	38.2	5.4	0.8	100.0(10,601)
2003년	기혼여성	25.7	28.7	37.1	7.9	0.7	100.0(11,145)
2006년	기혼여성	27.9	29.8	38.2	4.0	-	100.0(9,693)
2009년	기혼여성	28.5	32.1	35.0	4.4	-	100.0(9,791)
	기혼남성	39.8	32.1	25.4	2.8	-	100.0(9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연도별 자료.

표 2.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2009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미혼여성	16.9	46.3	31.8	2.8	2.2	100.0(1,580)
미혼남성	23.4	46.4	25.1	2.4	2.8	100.0(1,73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이러한 결혼가치관의 차이는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결혼이 보편성을 갖지 않고, 선택적이라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 독신자가 증가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여성과의 결혼이 원만치 않은 자원(resources)을 가진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해 다문화가족의 출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증가는 이혼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된다. 최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허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 할 수 있는 ‘절대로 해서는 안됨’과 ‘가급적 해서는 안됨’은 2000년 52.8%에서 2009년 47.5%로 감소하였고, 허용적 태도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은 동 기간에 15.5%에서 20.5%로 증가하였다.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가족원간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등에 기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혼은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문제시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출산율, 자녀양육, 이혼가족의 높은 빈곤율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고 가족불안정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어 미래 가족변화의 핵심요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재혼은 남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해혼(이혼 및 사별) 경험이 있는 경우의 결혼이다. 재혼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은 2000년 16.8%에서 2009년 20.9%로 증가하였으며, 부정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음’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은 동 기간에 30.3%에서 27.2%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 재혼 가치관의 증가는 재혼가족의 증가로 연결되며, 이혼 및 사별의 증가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년	3.3	12.2	30.2	38.0	14.8	1.4	100.0(10,598)
2003년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2006년	2.2	11.6	34.8	40.8	10.0	0.5	100.0(9,693)
2009년	2.0	18.5	31.8	39.1	8.4	0.2	100.0(9,796)

자료: <표 1>과 동일

표 4.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0.7	16.1	46.5	23.7	6.6	6.3	100.0(10,590)
2003년	0.8	19.9	47.2	21.5	5.9	4.6	100.0(11,127)
2006년	0.5	17.8	52.1	22.7	3.5	3.5	100.0(9,680)
2009년	0.4	20.5	49.5	23.4	3.8	2.5	100.0(9,797)

자료: <표 1>과 동일

2) 성평등 가치관의 변화

가부장적식이 팽배했던 전통사회 및 전기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가족관계에서 성평등 의식은 가족생활과 가족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본 고에서는 남아선호가치관에 의하여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관을 살펴보고 전망해 본다. 이는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대표적 지표로서 간주되어 왔고, 수년전까지 높은 호주제와 함께 남아선호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동향은 아들이 '꼭 있어야 함'과 '있는 것이 좋음'에서 '없어도 무관함'으로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현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회의 구조 및 제도가 이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다. 즉, 성평등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남아선호 가치관의 저하의 지속여부가 좌우될 것이라 판단된다.

표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

(단위: %, 명)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16.2	43.2	39.5	1.1	100.0(6,350)
2003년	14.1	41.8	43.3	0.8	100.0(6,599)
2006년	10.2	39.3	49.8	0.7	100.0(5,386)
2009년	8.9	39.2	51.8	0.1	100.0(4,868)

자료: <표 1>과 동일

3) 자녀가치관의 변화

결혼하여 자녀를 둘 것인가의 여부, 몇 명의 자녀를 둘 것인가는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자녀관이 정착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자녀수가 증가할 것인지는 가족원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 58.1%, 2003년 54.5%, 2006년 53.8%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그렇지만 2009년에는 55.9%로 지난 10여 년간의 감소를 반전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2000년 41.5%, 2003년 44.9%, 2006년 46.2%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44.1%로 감소하였다.

4) 한국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한계

자녀양육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 한국 저출산의 핵심요인임을 감안한다면, 양육의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의 의식 또한 가족에게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녀양육비는 한국가족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면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양육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이다. 이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부모의 자녀에 대한 끝없는 양육책임이 양육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할 때까지’가 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3.1%, ‘취업할 때까지’ 12.2%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자녀의 대학 졸업~결혼까지의 기간에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 책임의 한계는 과거 조사에서 보다는 다소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점차 대학

표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

(단위: %, 명)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2000년	58.1	41.5	31.5	10.0	0.5	100.0(6,363)
2003년	54.5	44.9	32.3	12.6	0.6	100.0(6,593)
2006년	53.8	46.2	34.1	12.1	-	100.0(5,386)
2009년	55.9	44.1	32.7	11.4	-	100.0(4,867)

자료: <표 1>과 동일

졸업시 또는 취업시까지로 단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5)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한국여성의 높은 교육열은 적극적 사회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종전에 여성의 몫으로 여겼던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의 변화, 가족의

경제력, 부부 권력관계,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 다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고에서는 성별 진학률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본다.

먼저 산업화 과정에서는 상급학교 진학률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 이를수록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

표 7.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3	8.6	9.6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0.2	46.3	49.6
취업할 때까지	11.5	11.9	12.2
혼인할 때까지	32.1	27.0	23.1
언제(까지)라도	6.3	5.5	5.0
기타	0.6	0.1	0.1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1.0	0.5	0.4
계(수)	100.0(11,106)	100.0(10,117)	100.0(9,075)

자료: <표 1>과 동일

표 8. 성별 진학률

(단위: %)

연도	초등학교→중학교 ¹⁾			중학교→고등학교 ¹⁾			고등학교→대학 ²⁾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85년	99.2	99.4	99.1	90.7	93.1	88.2	36.4	38.3	34.1
1990년	99.8	99.8	99.8	95.7	96.3	95.0	33.2	33.9	32.4
1995년	99.9	99.9	99.9	98.5	98.6	98.4	51.4	52.8	49.8
2000년	99.9	99.9	99.9	99.6	99.5	99.6	68.0	70.4	65.4
2005년	99.9	99.9	99.9	99.7	99.7	99.8	82.1	83.3	80.8
2010년	99.9	99.9	99.9	99.7	99.7	99.7	79.0	77.6	80.5

주: 1)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고 있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약 80% 전후에 도달하였으며, 남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진학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2009년부터는 역전하여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진학률은 2009년에 여성 82.4%, 남성 81.6%이었고, 2010년에는

여성 80.5%, 남성 77.6%로 격차를 더 벌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년간 47~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4세 이하 연령층은 감소하였고, 25~54세 연령층은 다소의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24세 이하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대학

그림 1. 대학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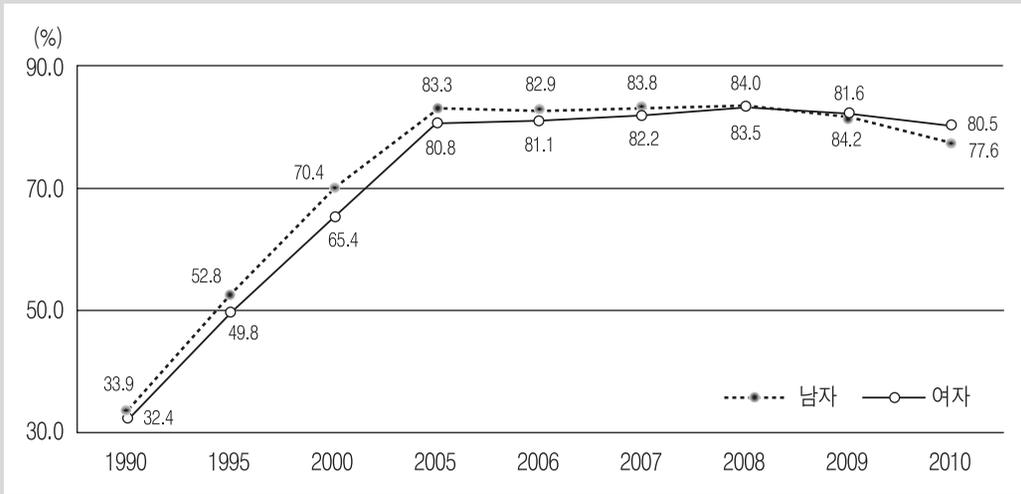


표 9.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연도	전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세 이상
1990년	47.0	18.7	64.6	42.6	49.5	57.9	60.7	63.9	60.0	34.5
2000년	48.8	12.6	61.2	55.9	48.8	59.3	63.8	64.9	55.3	35.5
2005년	50.1	10.3	62.6	66.1	50.2	59.0	65.6	63.1	58.3	33.1
2010년	49.4	8.5	53.5	69.8	54.6	55.9	65.9	65.6	61.3	33.4

주: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구, 연도별 자료.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높은 교육수준, 여성의 자아육구 증대, 보육서비스의 확충 등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증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가족의 취약 및 위기 요인의 증가

가족갈등, 가구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취약 및 위기 요인을 가진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의 발생은 새로운 가족갈등의 한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 높다. 본 고에서는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의 발생률과 가구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본다.

2010년 부부폭력 발생률 53.8%로 과거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 중한 신체적 폭력은 감소하였지만 그 외의 모든 폭력유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방임은 30.5%로 엄청난 증가를 보였고, 정서적 폭력도 42.8%로 크게 증가하였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경험 여부'를 파악한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학대 발생률은 59.1%이었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이다. 신체적 폭력과 정

표 10.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 명)

연도	전체 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발생률							(분석 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2004년	44.6	33.1	15.2	4.8	15.7	-	-	7.1	(5,916)
2007년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6,561)
2010년	53.8	42.8	16.3	3.3	16.7	10.1	30.5	10.4	(2,423)

주: 2007년 및 2010년 조사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를 포함한 것이며, 2004년 조사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것임.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표 11.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 명)

연도	아동학대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
		경한폭력	중한폭력	소계				
2007년	66.9	48.8	8.7	49.7	63.3	2.7	1.1	(4,425)
2010년	59.1	28.2	7.9	29.2	52.1	17.0	n.a.	(1,523)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연도별 자료.

서적 폭력은 크게 감소한 반면, 방입은 2007년 2.7%에서 2010년 17.0%로 증가하였다. 가족의 자녀보호기능이 크게 저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소득의 중위수준을 기준으로 중산층은 가구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하고, 그 미만과 초과 가구는 각각 하위층, 상위층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전체 가구 중 하위층과 상위층의 비율이 46.14~51.58%로 중산층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2~2004년 기간보다는 2005년 이후에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다는 점(집필자 판단으로 약 70%가 적정)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정성 유지에 부정적이라 하겠다.

7) 가구 및 개인의 인터넷 이용 증가

한국의 IT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이라 하겠으

며, 이에 따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은 가장 앞서 있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이 인간에게 주는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띤다. 즉, 개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음란·폭력물의 유통, 사생활 침해, 아동과 청소년의 음란·폭력물 접근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IT 기술수준의 향상은 지속될 것이며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가족원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8) 토요일무제 도입 및 확산

2002년 4월부터 월 1회 토요일무제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04년 7월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2011년 모든 사업장에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정부부문도 민간부문에 발맞추어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매주 2·4째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였고,

표 12. 가구소득의 양극화 실태

(단위: %)

연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상위층)
2000년	23.44	50.63	25.93	(49.37)
2001년	21.46	52.57	25.95	(47.43)
2002년	22.96	49.97	27.07	(50.03)
2003년	24.03	48.42	27.55	(51.58)
2004년	23.11	48.78	28.11	(51.22)
2005년	19.31	54.07	26.62	(45.93)
2006년	19.02	53.25	27.73	(46.75)
2007년	20.00	53.86	26.14	(46.14)

자료: 강성진 외(2010 재구성).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3. 가구 인터넷 접속률

(단위: %)

연도	한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	미국
2000년	49.8	32.0	11.9	18.8	-	-	19.0	41.5
2005년	92.7	60.0	-	38.6	57.0	8.8	60.2	-
2006년	94.0	64.0	40.9	40.0	60.5	10.4	62.6	-
2007년	94.1	67.0	49.2	43.4	62.1	11.9	66.7	61.7
2008년	94.3	-	62.3	46.9	63.9	13.7	71.1	-

주: 핸드폰, PDA, iPad 등 mobile Internet 포함
 자료: OECD, OECD Factbook 2010.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가족원간의 공유시간과 대화가 부족한 한국인에게 있어서 토요휴무제는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된다. 특히, 학교의 토요휴무제 전면도입은 그동안 “반쪽 제도 도입”으로 인식하였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가족은 금요일이 주말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 되어 가족생활, 특히 가족여가문화의 패턴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3. 미래 한국가족의 특성

전술한 한국사회의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가족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다음의 일곱 가지를 미래 한국가족의 특성으로 요약 제시한다.

1) 가구의 지속적 분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2010년 우리나라의 일반가구 수는 17,334천

가구로 20년 전(1990년) 11,355천 가구에 비해 52.7% 늘어났으며,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이 1990년은 9.0%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23.3%로 증가하였다. 이는 미혼독신가구와 노인독신가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표 15>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전자는 주로 도시지역에, 후자는 농어촌 지역에 많음을 짐작케 한다.

마찬가지로 2인 가구의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녀가 모두 결혼하여 분가한 이후의 성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에 의하여 많이 나타날 한국 미래가족의 또 다른 유형이 될 것이다.

2) 여성의 취업증가와 돌봄서비스 부담 증대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는 사회경제활동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강한 자아 의식은 결혼 후에도 여성의 취업을 지속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한국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

표 14. 1~2인 가구 비율

(단위: 천 가구, %)

구분	1990	2000	2010p
일반가구수	11,355	14,312	17,334
1인 가구 비율	9.0	15.5	23.3
2인 가구 비율	13.8	19.1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연도별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보도자료.

표 15. 거주지역 및 연령별 1인 가구(2000~2005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동지역	전체	1,643	100.0	2,440	100.0
	30세 미만	505	30.7	657	26.9
	30~39세	367	22.4	565	23.2
	40~49세	241	14.7	396	16.2
	50~59세	171	10.4	276	11.3
	60~69세	193	11.7	268	11.0
	70세 이상	165	10.1	277	11.4
읍면지역	전체	582	100.0	731	100.0
	30세 미만	56	9.6	66	9.0
	30~39세	48	8.2	64	8.8
	40~49세	54	9.2	78	10.7
	50~59세	75	13.0	90	12.3
	60~69세	159	27.3	162	22.1
	70세 이상	190	32.6	271	37.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연도별 자료.

로 취업여성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사부담' (27.2%)과 '자녀양육 부담' (23.1%)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직,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사부담'이,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는 '자녀양육 부담'이, 고용주는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가족의 부부간 가사분담 형태를 살펴보면,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이 2006년 29.7%에서 2009년 40.2%로 크게 증가한 반면,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

표 16. 현 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없음	자녀양육 부담	가사부담	부부 공유 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 시간 부족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노부모 부양	기타	계(수)
전체	27.3	23.1	27.2	3.2	12.7	4.9	0.8	0.8	100.0(3,357)
고용주	23.9	19.4	19.4	3.0	26.9	7.5	-	-	100.0(67)
자영업자	33.8	23.6	22.8	5.4	11.3	2.1	0.5	0.5	100.0(373)
상용근로자	24.4	25.6	24.2	3.6	13.1	7.4	0.8	1.0	100.0(1,440)
임시근로자	27.7	22.7	29.6	2.0	12.2	4.3	0.5	0.9	100.0(746)
일용근로자	25.5	22.3	33.5	4.7	9.7	2.2	0.7	1.4	100.0(278)
무급가족종사자	30.9	16.1	34.0	0.9	13.9	2.0	2.2	-	100.0(453)

자료: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를 맡음'은 2006년 24.2%에서 2009년 10.8%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은 2006년 32.2%, 2009년 33.4%로 유사하였다. 따라서 부부 가사분담 형태에서 부인이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고 있음이 무려

84.4%를 차지하였고, 그 외는 남편과 부인이 공동 또는 남편이 도와주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한국가족의 부부 가사분담 형태

(단위: %, 명)

가사분담 형태	2006년	2009년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29.7	40.2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32.2	33.4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0.6	0.8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7.4	5.9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24.2	10.8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0.7	0.6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3.9	2.4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1.3	5.8
계(수)	100.0(8,905)	100.0(9,311)

주: 1) 2006년은 15~59세 기혼가구를, 2009년은 15~64세 기혼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표 16>과 동일

3) 가족내 성평등의 강화(여성권한의 상승과 남성권한의 저하)

가족생활에서 부부권한의 균형은 성평등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갈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과거 한국가족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남편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부인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남성중심의 가족생활’이 이루어졌으며, 가부장제적 요소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가족생활에서의 결정권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해서는 부인이 결정권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국가족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과 투자 및 재산관리는 부부공동 결정이 가장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조사에서보다 2010년 조사에서 더 강해졌다. 더군다나 부부공동 결정이 아니라 일방이 결정할

경우에 (주로 또는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교육에 관한 결정도 부부공동 결정이 가장 높았으나 (주로 또는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았다(2007년 31.8%, 2010년 40.6%). 특히, 생활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주로 또는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고 있었고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4) 이혼 및 재혼가족의 증대

전술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이혼가족과 재혼가족의 증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혼은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1990년 45,694건이 2009년 123,999건, 2010년(잠정집계) 116,900건으로 지난 20년간을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증가는 재혼의 증가를 낳고

표 18. 부부 의사결정 방식

(단위: %, 명)

권력관계	조사연도	(주로/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주로/대체로) 부인결정	기타
자녀교육	2007년	4.3	43.0	31.8	0.4
	2010년	2.1	56.7	40.6	0.6
주택구입	2007년	13.6	69.2	10.1	0.2
	2010년	8.4	77.2	14.0	0.3
투자 및 재산관리	2007년	19.4	60.6	16.6	0.2
	2010년	11.2	70.8	17.5	0.5
생활비 지출	2007년	8.1	35.8	55.4	0.1
	2010년	4.5	43.9	50.9	0.7

주: 2010년 조사에서 부부각자 유형은 기타로 분류함.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연도별 자료.

있다. 즉, 1990년 42,663건이 2009년 72,830건으로 지난 20년간 큰 증가를 보였다. 재혼가족 부부의 재혼당시 혼인상태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재혼남과 재혼녀의 비율이 5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초혼남과 재혼녀'의 혼인이 26.1%로 높았다. 과거에는 '재혼남과 초혼녀'가 '초혼남과 재혼녀'보다 많았으나, 1995년 이후부터 역전현상이 나타나 지속되고 있음도 최근 재혼가족의 특성이다.

향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의 증가는 보편적 경향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이혼가족과 재혼가족의 증가를 의미하고, 한국가족의 특성이 변화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5) 다문화가족의 증대

2009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만 3천 3백

건으로 전년보다 2천 9백건 감소하였으나, 전체 혼인중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2004년 이후 1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외국인과 혼인 중 75.5%가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06년 방문취업제¹⁾ 실시와 베트남의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 등으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만 5천 1백건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하였으나,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8천 2백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대내외적인 여건의 성숙과 한국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갭(gap)으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이어져 가족관계, 가족문화, 자녀양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표 19. 총 이혼 및 재혼 건수와 재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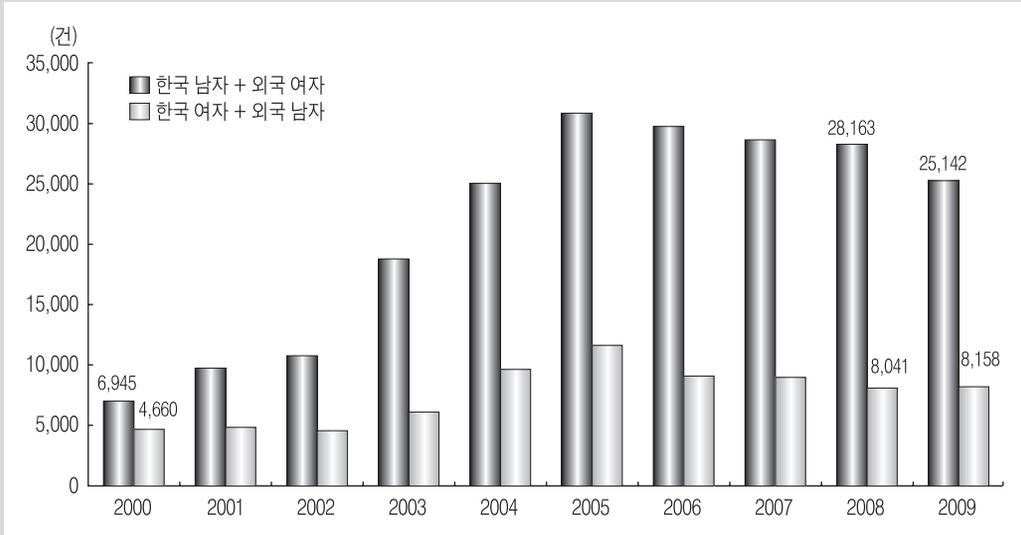
(단위: 건, %)

연도	총 이혼건수	재혼건수 및 재혼구성			
		총 재혼건수	초혼(남)-재혼(여)	재혼(남)-초혼(여)	재혼(남)-재혼(여)
1990년	45,694	42,663	21.8	34.0	44.2
1995년	68,279	53,999	26.2	26.1	47.7
2000년	119,455	59,639	27.2	19.2	53.5
2005년	128,035	79,942	25.3	16.4	58.3
2009년	123,999	72,830	26.1	19.2	54.7
2010p	116,900	-	-	-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이혼편), 연도별 자료.

1) 방문취업제는 중국, 사할린 등지로 강제이주되었던 재외동포를 위하여 일정기간 취업 및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외동포의 고용기회가 증가되었다고 함.

그림 2.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자료 : 통계청, 혼인통계, 연도별 자료.

6) 취약·위기가족의 증대

전술한 이혼·재혼가족, 다문화가족 외에도 가족갈등, 가구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취약 및 위기가족이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과 ‘자립 및 자활의 어려움’은 소득 및 재산에서의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세기말에 닥친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었고,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개선되기는 커녕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의 지속화로 취약·위기가족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이 없다면 한계계층의 가족이 급증하게 되고 사회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7) 가족 여가문화 확산 및 중요성 증대

토요휴무제 도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으며, 2011년에는 학교에도 전면 확대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한국사회에서의 5일 근무제가 정착된다. 이에 따라 가족의 생활시간 중 여가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여유시간이 많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원간의 접촉시간이 증가하면서 갈등증대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고, 여가문화를 즐기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도 되어야 하는 등 단순히 다룰 수 있는 점은 아니지만 가족 여가문화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평일보다 휴일에 여가시간이 많으며, 맞벌이 가족보다 홑벌이 가족의 여가시간이 평일과 휴일 모두에서 많다는 사실은 토요휴무제

가 가족 여가시간을 많이 확보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0. 가족 평균 여가시간: 평일 및 휴일 비교(2010년)

(단위: 분)

구분	평일	휴일
전체	106.0	182.8
맞벌이 가족	91.1	163.0
홀벌이 가족	116.8	199.6

자료: 여성가족부,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4. 미래 한국가족의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 및 사회적 보호의 강화

도시지역에서의 1~2인 가구와 농어촌지역에서의 1~2인 가구의 특성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전자는 주로 젊은 연령층이, 후자는 노인층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먼저 1~2인을 위한 저렴한 주거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 1~2인 가구의 가구원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젊은 연령층이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켓, 대중교통, 주차장 등 근린시설이 가까이 있는 지역에 주거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 많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독신 및 노인부부 가족이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내부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노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야 할 것이다.

2) 돌봄서비스 및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 가족보호 등 돌봄서비스와 가사지원에 대한 취업여성의 강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 보육서비스 지원, 간병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충분성, 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수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사업대상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산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역별로 충분히 갖추고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수준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게 되므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수준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력 pool’을 갖추며, 자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자격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성평등 의사결정 및 가족문화의 정착 지원

한국가족에서 성평등 의사결정은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자녀양육 및 가사에서 주로 여성이 의사결정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부담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남성은 무관심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성평등 가족내 역할이 정착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가족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예를 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등 가사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남성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더욱 변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성평등적 의사결정 및 가족문화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남성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이혼·재혼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취약·위기가족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는 가족특성과 가족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제조건이다. 개별가족이 어떤 문제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과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가족이 취약성과 위기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많이 갖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사례관리와 최근 추진되기 시작한 공공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민간과 공공 사례관리의 역할분담과 연계강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례관리를 위한 별도의 통합된 전담기관(부서)과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 가족 여가시간의 활용 지원 및 가족스스로의 노력 필요

토요휴무제의 정착으로 미래 한국가족의 여가시간은 증가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가족여가 제약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여가프로그램과 정보’, ‘여가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여가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도시와 농촌할 것 없이 지역 균형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족스스로도 ‘공동의 관심사’를 개발하고, 가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여가시간을 보낼 때 전체 가족원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족의 유대감과 안정감이 증진되고, 화목한 가족환경, 민주평등한 가족관계를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표 21. 가족여가 제약요인

(단위: %)

구분	2007년		2010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일이 너무 바빠서	25.6	19.5	14.0	10.8
경제적 부담 때문에	27.5	30.7	17.3	16.3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없어서	3.6	2.9	8.6	7.6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2.8	3.3	9.1	9.8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15.0	18.6	15.3	19.0
가족공동의 관심이 없어서	3.9	3.9	5.7	6.1
환자, 노인, 장애인, 어린자녀 돌봄노동 때문에	0.9	1.3	2.7	3.2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0.8	1.2	0.8	1.6
몸이 피곤해서	9.4	7.7	11.7	8.4
기타	-	-	1.9	2.4
해당없음	-	-	13.1	15.0

자료: <표 18>과 동일

5. 결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위험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가족의 다양화를 포용하면서 이들 가족이 안고 있는 취약위기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사회정책의 가정 우선순위에 두는데 있다. 가족원 개개인의 역량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정착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음도 한국가족의 미래라 하겠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성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개인과 동등한 위상에서 가족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할 경우 국가부담은 엄청나게 증대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역사가 증명하였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심리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한국가족의 현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미래 한국가족의 지속가능성과 개인 및 사회발전의 동참이 가능할 것이다. **복원**